

〈제2호 서식〉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2. 7. 12.

1. 청구 단체	단 체 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대 표 자	경실련 공동대표 최정표 (인) / 실무 국장 윤철한		
	단체설립목적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복지사회의 기틀 마련에 기여		
	허가신고등록기관	기획재정부		
	회 원 의 수	2만3천명	조직년월일	1989년11월4일
	연락전화 등	전화	02-3673-2146	FAX
2.	감사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		
3.	감사청구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약관 인가 등 직무유기·직무위반에 대한 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p>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를 위반하거나 유기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시킨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처리 2.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의결처리 3.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여부 판단 신고처리 무시 4. 감사원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정요구 불이행 			
5. 청구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며,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기반시설인 통신망의 공공성을 지키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3개의 통신사업자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등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위반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지하는 등 직무위반 및 직무유기를 위반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망중립성 포럼,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개 운영하여 합리적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할망정, 사업자간 대립과 불신, 이용자 피해로 인한 사회적 부담만 증가시켰습니다. - 이에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을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 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미처리, 감사원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시정요구 불이행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6. 관련 증거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스마트TV 접속제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서 3. 이동통신사의 mVoIP차단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서 4.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신 공문 5. 방통위 “mVoIP 시장자율에 맡길 것”, 연합뉴스 기사 6. 한겨레 보도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해명 보도자료 			